독일총선 전후 정치분석

2005년 9월 29일

주 독 일 대 사

Ⅰ. 대담개요

- 일　　시 : 2005. 9. 26 17:00~19:00
- 장　　소 : 대사 집무실
- 대담목적 : 9.18 조기총선 결과를 분석하면서 총선결과에 나타난 독일 정치의 이념적 측면등 여러 현상을 분석하고, 향후 독일 정세를 전망하기 위해　대담

Ⅱ. 대담주제

Ⅰ. 9.18 총선 평가 ---------- 1

Ⅱ. 조기총선 실시 내막 ---------- 6

Ⅲ. 정치경색 해법 : 경제개혁과 대연정 ---------- 8

Ⅳ. 독일의 정치 이념, 행태 분석 ---------- 15

Ⅲ. 첨부자료

1. 사민당과 기민/기사연합의 선거공약 비교 ---------- 22

2. 슈뢰더 총리 기자회견(조기총선 제안) ---------- 24

3. 쾰러 대통령 TV담화문(조기총선 결정) ---------- 25

4. 황야에 버려진 자유주의자들(8월 27일자 Economist 기사) ---------- 28

대 담 요 록

Ⅰ. 9.18 총선 평가

1. 전체적인 평가

▲ 대사 : 9월 18일 독일 총선의 결과는 독일 사람들에게는 말 그대로 재난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러한 결과를 예측하지 못 하였지요. 생각해 볼 수 있는 결과 중에서 최악의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신문기사는 국민의 집단적인 지혜는 자기중심적인 엘리트의 상식적인 지혜보다 더 현명한 것이라는 민주주의의 대전제를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기민ㆍ기사당 연합은 제1당이 되었지만 기대이하로 지지율 35.2%로 225석을 얻는 데 그쳤고, 사민당은 막판에 기대 이상으로 선전하여 34.3%의 지지율로 222석을 얻었습니다. 겉으로 들어난 결과만 보면 어느 정당이 승리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독일 유권자들은 무언가 의사표시를 했지만 그 뜻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결과로 인해 선거 이전에 예상되었던 기민ㆍ기사당 연합과 자민당만의 연정이 불가능하게 되어 신호등 연정, 자메이카 연정[1] 등 거대정당 1개와 2개의 군소정당간의 3당 연정이 논의되다가 이제는 사민당과 기민ㆍ기사당 연합간의 대연정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독일 연방하원 선거를 총체적으로 평가하기를 혹자는 민주주의 승리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완전 난장판(카오스)[2]이라고 하는 데 총평을 해주시지요.

▲ 의원 : 이번 선거의 특징을 간단히 표현한다면, 슈뢰더(Schroeder) 총리는 패배하지 않았고, 메르켈(Merkel)은 승리하지 못했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민당, 기민· 기사당 연합 등 거대정당이 과반수 획득에 실패하였고, 진보성향 또

1) 신호등 연정 : 사민당(적), 자민당(황), 녹색당(녹)간 연정
자메이카 연정: 기민당(흑), 자민당(황), 녹색당(녹)간 연정으로 자메이카 국기의 색깔

2) Bild지는 선거 직후 이 정치적 혼란을 1면 톱기사로 '총리들의 전쟁'으로 뽑았고, Tageszeitung은 '두 총리의 나라'라고 제목을 달기도 했다.

는 좌파성향의 정당 즉, 사민당, 녹색당, 좌파연합이 약 51%를 획득하여 사실상 좌파성향 정당이 승리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이 3당간 연정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에, 결국에 가서는 사민당, 기민·기사당 연합간의 대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 기민당의 득표 저조 원인

▲ 대사 : 선거 결과는 많은 독일인, 특히 경제인들에게는 예상치 못했던 충격이었습니다. 선거 유세기간중 지지율 차이가 줄어들어 갔지만 대부분의 여론조사기관은 기민· 기사당 연합과 자민당의 야당연합이 승리할 것으로 예측하였지요. 심지어 선거 전날까지도 여론조사기관은 기민· 기사당 연합이 40% 이상의 지지를 얻을 것이고, 메르켈이 최소한 아무런 도전 없이 총리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하였지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지지율이 35.2%였습니다. 지지율이 저조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의원 :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먼저 정당에 투표하는 제2투표에서 기민· 기사당 연합과 자민당의 연정을 찬성하는 지지자들이 확실한 연정을 위해 너무 많이 자민당으로 몰렸습니다. 약 3%정도 됩니다. 그리고 선거 막판에 슈뢰더 총리가 자기 특유의 투지를 발휘했습니다. 슈뢰더는 선거 수 주를 남겨 놓고 국민들로 하여금 사민당과 기민· 기사당 연합의 정강정책을 자세히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인기와 신뢰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여론조사 때에는 부동층이거나 선거불참의 성향을 보였던 유권자들이 막판에 참여하여 사민당을 지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메르켈 당수가 차기 재무부 장관으로 내정했던 키르히호프(Kirchhof)[3]는 훌륭한 세법전문가이며 학자이기는 하지만, 사전에 기민· 기사당 연합과 협의도 없이 자기 의견을 국민들에게 발표해 버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 대사 : 메르켈이 패배한 것은 제시된 경제정책이 너무 세부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지 미래에 대한 비전 즉 그랜드 디자인이 없었으며,[4] 키르히호프

3) 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 출신 재정 전문가로 하이델베르크 대학 교수임. 이번 총선에서 메르켈이 차기 재무부장관 후보로 거론하였으나, 당론(12%-39%)과는 다른 소득세 단일세안(25%)을 주장하여 기민·기사당 연합이 슈뢰더 총리로부터 집중 공격받아 이번 선거에서 기민·기사당 연합이 저조한 지지율을 얻게 되는 큰 요인이 되었다.

4) Die Welt지 분석이며, 정치학자 Walter는 "기민당은 기민당이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유권자에게 설득시키는 데 실패했다."고 분석했다.

(Kirchhof)를 재무부장관 후보로 결정함으로써 슈뢰더에게 강력한 공격의 탄환을 제공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5] 키르히호프가 선거전에 참여하기 이전부터 소득세 단일세율안(25%)을 주장하지 않았나요? 그리고 기민· 기사당 연합은 일반 서민이 사회복지정책의 재원마련이라는 목적은 이해면서도 반대할 것이 뻔한 부가가치세를 16%에서 18%로 인상하겠다고 하였나요?

▲ 의원 : 키르히호프가 단일 소득세율을 오래전부터 주장해 온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속해 있는 기민·기사당 연합의 부가세 인상안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당론에 따라 부가세 인상을 찬성하는 대신, 소득세의 단일세율안(25%)을 주장했습니다.

부가가치세 인상안 자체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민당의 주장은 현재로서는 부가가치세를 인상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질임금의 증가가 없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언젠가는 인상해야겠지요. 따라서 이 문제는 정책의 잘잘못의 문제가 아닌, 이를 도입하는 시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 대사 : 기민· 기사당 연합도 저소득층이 슈뢰더의 개혁만으로도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터인데 사회복지를 더 축소하는 강력한 개혁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한 정치적 고려는 무엇이었습니까?

▲ 의원 : 메르켈이 주장한 것처럼 자신은 개혁정책을 주장함으로서 정직함을 과시하려 했지만, 이는 잘못 짚은 것입니다. 감내하기 힘든 개혁정책이라도 그것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만은 결국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이것이 바이에른 슈토이버(Stoiber)[6]도 인정한 큰 실수였지요.

아시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여론조사시 개혁을 찬성한다고는 하지만, 막상 자신이 개혁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 격렬하게 반대하지요. 메르켈은 그러한 것을 잘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3. 좌파성향 정당 승리

▲ 대사 : 의원께서 모두에 좌파성향의 정당들이 51%를 획득하여 실질적으로 좌파 정당의 승리였다고 하셨는데요. 이번 선거에서 지식기반사회의 변화에 부응할 수 없는 또는 부응하기를 두려워하는 많은 유권자들이 좌파정당에 투표하였으며,

5)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분석
6) 기민당의 자매정당인 기사당의 당수이며, 2002년 총선시 기민·기사당 연합의 총리후보로 나와서 슈뢰더에 패배하였다.

다른 한편에서는 세계화과정에서 지지부진한 관료주의 행태를 더 이상 참기가 어려웠던 소위 신자유주의를 옹호하는 유권자들은 자민당을 지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 의원 : 의미 있는 지적입니다. 저는 다른 각도에서 세 가지 점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권자들은 선거가 이뤄지기 전에는 통상 정부의 정책만을 비판하는 성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거 3-4주 전부터 양당의 정강정책에 대한 비교와 분석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막상 의료보험제도, 노동시장 개혁문제 등 여러 가지 양당의 정책을 비교해 보니까 기민· 기사당 연합의 제안이 나을게 없거든요.

두 번째로 슈토이버 바이에른주 총리는 선거전 내내 메르켈 후보를 한 번도 성심으로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선거가 끝날 때까지 연방정부에 참여하겠다는 자신의 거취도 밝히지 않아 자신의 지지층을 메르켈의 지지로 이끄는 노력도 없었으며, 동독 주민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발언[7]들을 했지요. 그리고 사실 메르켈도 그리 좋은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9월 14일에 있었던 TV토론을 계기로 슈뢰더 총리의 인기가 막 치고 올라왔습니다. 사실 그간 언론에서는 메르켈의 이미지를 미화하려는 노력도 심심찮게 있었지만, TV토론을 계기로 슈뢰더 총리는 국민들에게 강력한 이미지를 심어주어 인기를 회복하는데 성공했습니다.

▲ 대사 : 이번 총선의 최대 수혜자는 좌파연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좌파연합이 선전한 이유를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 의원 : 사실 좌파연합은 구동독지역에서는 구 공산당 후신인 민사당(PDS)과 서독지역에서는 사민당에서 떨어져 나간 라퐁텐의 극좌파간 연합으로 이번 선거에 대비한 전술적 연대입니다. 저는 이러한 전술적 연대가 그리 오래 가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 대사 : 좌파연합에 간 표는 사민당에 갈 표였는가요?

▲ 의원 : 부분적으로 그렇습니다. 서독에서 좌파연합 쪽으로 간 표는 원래 사민당 지지표였습니다.

---

7) 슈토이버 바이에른 주 총리는 총선 전 이미 역사적으로 공산당이 실패한 바 있는 구동독지역에서 구공산당 계열인 민사당(PDS)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지자 "가장 우둔한 송아지가 자기를 도살할 주인을 택한다"고 발언하였으며, 이 발언은 구동독지역 많은 유권자들을 자극, 많은 구동독 유권자들이 기민당을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4. 위태한 메르켈의 입지

▲ 대사 : 메르켈이 이혼 경력, 개신교 신자, 동독 출신이라는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기민당내에서 어떻게 1인자가 될 수 있었는가요? 그리고 기민당 내에서는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론에서 메르켈을 희생양으로 삼아 칼날[8]을 세우고 있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 메르켈은 기민당의 정치 자금 스캔들이 발생하였을 때, 자신을 키워준 콜(Kohl)과 재빨리 결별하고 당내 유력 정치인인 쇼이블레, 제호퍼, 메르츠 등을 권력에서 밀어내는 수완을 보였습니다. 권력에 대한 본능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지요. 이혼 경력이나 종교문제는 보수적인 바이에른주 지역당인 기사당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으나, 기민당에서는 문제될게 없습니다. 기민당 내에서 슈토이버나 메르츠, 그리고 기라성 같은 주총리들이 반 메르켈 전선을 형성하여 이번 선거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당내 권력에서 밀어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 목차로

8) 시사평론가 Christian Bommarius는 친 메르켈 신문인 Bild지에 “메르켈의 정치 생명은 끝났다. 유일한 현실적 대안은 대연정이지만, 대연정은 메르켈이 없어야 가능하다”고 기고하였다.

Ⅱ. 조기총선 실시 내막

1. 슈뢰더의 명예로운 퇴진?

▲ 대사 : 슈뢰더 총리가 조기총선을 한 이유[9]가 정국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연방하원 의석의 과반수 획득이었는 데 과반수 획득에 실패했으며, 한편, 쾰러(Koehler) 대통령도 안정적인 정부 수립[10]을 원했는데 결과는 그렇지 못하여 슈뢰더 총리 및 쾰러 대통령 둘 다 그 본래 의도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의원 : 겉으로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슈뢰더 총리가 안정적인 절대다수 확보를 위해 조기 총선을 실시한다는 것은 대외적인 이유일 뿐입니다. 슈뢰더는 이미 정계은퇴를 마음속으로 결정해두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슈뢰더에게 조기총선은 일종의 명예로운 퇴진의 길을 열기 위한 전략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야당이 연방상원의 2/3를 장악[11]하여 개혁 추진이 어려운 가운데, 계속 집권을 함으로써 종국에는 지지율 20%로 마치 교수형을 당하느니 차라리 조기선거를 치러 떳떳하게 총살형으로 명예로운 퇴진을 하자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4%정도의 지지율을 얻어 이제 총살형도 면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지요.

▲ 대사 : 최근 영국의 The Economist는 슈뢰더가 재집권하면 프랑스의 드골식 대통령제 개헌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사민당 내에 이러한 흐름이 있습니까?

▲ 의원 : 역시 처음 듣는 일입니다만 그러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2. 그러나 메르켈과의 동반퇴진

▲ 대사 : 총선 후 슈뢰더 총리의 행보를 보면, 총리를 계속 하겠다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데요. 일부 언론은 슈뢰더 총리의 전략은 기민· 기사당 연합 내의 소룡들을 부추겨 결국은 메르켈을 제거하여 메르켈과 동반 퇴진을 하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물러나려면 깨끗이 물러날 것이지 슈뢰더 총리는 메르켈을 왜 그렇게 미워하는가요? 기민·기사당 연합 내에는 슈토이버 같은 정적 등이 있는데...

---

9) 슈뢰더 총리의 조기총선 발표는 첨부 2 (슈뢰더 총리의 기자회견문) 참조
10) 쾰러 대통령의 조기총선 승인은 첨부 3 (쾰러 대통령 TV 담화문) 참조
11) 5.22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선거결과, 각 연방주를 대표하는 연방상원에서 야당이 2/3(69명중 51명) 다수를 차지하였다.

▲ 의원 : 슈뢰더와 슈토이버는 알려진 것처럼 그렇게 사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메르켈은 지난 수년간 슈뢰더를 여러 차례 곤경에 빠트렸습니다. 슈뢰더가 기민·기사당 연합내의 소룡들로 하여금 결국은 메르켈을 희생양으로 만들어 제거하려는 의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슈뢰더는 이미 전부터 정계에서 은퇴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단지 선거에서 패배한 패자로서 권좌에서 내려오고 싶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메르켈과의 동반사퇴[12]가 필요한 것이다.

▲ 대사 : 메르켈이 슈뢰더를 곤경에 빠트렸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가요?

▲ 의원 : 사민당과 녹색당의 많은 정책을 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연방상원에서 부결시키는 데 메르켈은 항상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유세전을 치르면서 서로에 대한 악감정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3. 슈뢰더와 언론

▲ 대사 : 거의 모든 언론에서 슈뢰더가 이미 지나간 인물이라고 하였지만 그는 독자적으로 자신의 대중적 인기와 켐페인 기술로서 거의 불가능한 것을 이루어 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슈뢰더는 '언론황제'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능숙하게 언론을 다루어 왔는데, 언론이 조작을 통해 자신을 해치려 했다고 주장하는 등 언론에 대한 공격을 하는 사연은 무엇입니까?

▲ 의원 : 슈뢰더가 언론을 능란하게 다룬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최근 수개월 동안 언론으로부터 섭섭한 대접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슈뢰더 총리와 메르켈과의 9월 14일 TV대결이었습니다. 여론이 역전되기 시작한 전환점이 된 TV대결 후 대부분의 언론들은 해설기사 등을 통해 메르켈에게 후한 점수를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언론들은 슈뢰더에게 '경제거물들의 총리(Kanzler der Bosse)'이라는 사민당의 색깔에 맞지 않는 별명을 지어주었지만, 정작 선거기간동안 언론과 경제계로부터 커다란 지원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 대사 : 영국의 거의 모든 언론은 독일의 정치현상을 냉소적으로 보고 있는데, 독일 사람들은 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요?

▲ 의원 : 기사는 읽어본 적이 없어 잘 모르겠으나, 영국친구들이나 영국언론은 기본적으로 독일에 대해 우호적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목차로

12) 기민당 의원은 "내가 총리가 못되면, 메르켈도 총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일종의 물귀신 작전이라고 표현하였다.(9.23 이수혁 대사 면담)

Ⅲ. 정치경색 해법 : 경제개혁과 대연정

1. 경제개혁 〈Agenda 2010〉

▲ 대사 : 슈뢰더 총리는 2003년 3월 경제개혁을 위한 Agenda 2010을 발표하고, 그해 12월 연방상원에서 기민·기사당 연합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개혁안을 통과시켜 시행중인데, 지난 5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선거에서 패배한 후 다수의석을 확보하겠다며 조기총선을 하였습니다. 기민당도 〈Agenda 2010>의 원칙에 동의하였습니다. 도대체 〈Agenda 2010>과 경제개혁은 무엇이 문제였고, 기민당이 반대하거나 다른 제안을 내놓고 있는 사안은 무엇입니까?

▲ 의원 : Agenda 2010과 관련하여 슈뢰더의 가장 큰 실수는 2003년 3월에 개혁안을 연방하원에서 선언하면서, 사전에 당은 물론이고 국민들과 전혀 대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습공격이었지요. 그러니 국민들이 어떻게 그러한 총리를 신뢰하겠습니까? 개혁을 추진하는 데는 국민의 신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선거전이 시작되면서 국민들은 양당의 정책을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그때서야 슈뢰더는 국민들의 신뢰를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었지요.

▲ 대사 : 의원님의 설명에 대해 약간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개혁안들이 기민·기사당 연합이 장악한 연방상원을 통과하는 등 여야 간의 협조 하에 그래도 잘 시행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사민당과 기민당은 무엇을 더 추진하려고 합니까?

▲ 의원 : 슈뢰더 총리가 기민· 기사당 연합의 지원을 받았다는 것은 잘 못 알려진 사실입니다. 기민· 기사당 연합은 연방상원의 2/3라는 확실한 절대다수를 차지하기 전까지는 부분적인 협력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주차원에서 사민당-기민당간 대연정을 실시하는 주에서는 연방상원에서 기권표를 던짐으로서 어느 정도 측면지원이 가능했지요. 그러나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선거를 기점으로 야당이 상원의 2/3를 차지하게 되자마자 사민당은 상하원 중재위원회 내에서 의제를 설정할 수 있는 권한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13] 야당이 모든 정책을 마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 대사 : 그렇다면,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 포기[14]하거나, 부득이 타협할 수밖에

---

13) 각주 12번 참조

14) 한 의원은 그러한 대표적 예로 연방정부와 주정부간의 권한 배분에 관한 연방제 개혁안을 들었다. "연방제 개혁안은 상원의 관여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상하원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연방제 개혁안이 거의 성사단계에 있었는데, 교육분야에서 이견 때문에 실패하였습니다. 당시 야당 협상대표는 바이에른 주총리인 슈토이버 이었는데, 아시다시피 바이에른주가 수학능력평가에서 1등을 차지한 것을 감안하여 동 주총리가 교육제도를 바이에른식으로 고수하는 바람에 연방제 개혁 논의가 무산되었습니다."(9.23 이수혁 대사 면담)

없었던 대표적인 정책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있는지요?

▲ 의원 : 사민당은 원래 실업수당I(최종 봉급의 69%)을 2008년 말까지 연장하고, 사회보조비와 실업수당을 통합한 실업수당II(정액으로 구서독지역 345유로, 구동독지역 331유로)의 실행을 위한 유예기간을 두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의 강요로 2005년 1월부터 실행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의사진료 때 분기당 내는 진료비(10유로) 또한 사민당의 정책이 아니었으나 어쩔 수 없이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야 했지요. 실업자가 제공되는 일자리를 거부할 수 없도록 강화한 것도 야당의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방하원을 통과한 2004/2005년도 예산안도 무수한 협상을 거쳐서야 가까스로 연방상원을 통과할 수 있었지요.

▲ 대사 :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볼 때 '사회적 시장경제'라는 정치적· 경제적·사회적 국가목표에는 국민적 합의가 있으며, 다만 경제개혁을 둘러싼 현재의 정치적 갈등은 개혁의 폭과 관련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물론 개혁의 폭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정쟁으로서 반대를 위한 이견인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 의원 : 맞는 말씀입니다. 목표는 같지만 그 실현하는 수단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민당과 사민당 간에 대연정이 가능하다는 논리입니다.

2. 정부구성의 다양한 해법

▲ 대사 : 처음 말씀드린 신호등 연정, 자메이카 연정 방안[15] 이외에도 지금 정국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외국의 사례에서 배우자는 방안의 하나로 1980년대 이스라엘이 채택했던 것처럼 슈뢰더 자신이 2년을 집권하고, 메르켈이 2년을 집권하게 하자는 교차집권 방안을 제의하였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 의원 : 슈뢰더가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성공하면 총리자리를 계속 유지하겠지요. 그러나 그는 이미 총리직을 떠날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

15)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성과를 거두지는 못할 것 같다. 자민당은 유권자들에게 한 공약 즉, 선거 기간 중 사민당과 녹색당과의 연정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이들 정당과의 연정에 참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기민당과 녹색당간의 문화적인 차이는 매우 크다. 녹색당의 대표직을 물러나게 될 요시카 피셔는 녹색당이 공유점이나 정당의 특색상 기민당과 연대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어렵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연정에 미련을 갖는 사람도 있다. 카트린 괴링-에카르트 녹색당 원내의장은 "이번 총선으로 적·녹 연정만을 상정해온 우리 녹색당의 '바빌론의 유수'는 끝이 났다. 현재 메르켈이 이끄는 기민·기사당 연합과는 연정이 거의 불가능하나, 주정부차원에서부터 기민당과의 연정을 서서히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고 하였다.
이와관련, 기민당 의원은 실제로 자메이카 연정을 하겠다기 보다는 슈뢰더 총리를 압박하여 슈뢰더 총리를 제외한 대연정을 추진한다는 복안으로 이해한다고 했다.(9.23 이수혁 대사 면담)

▲ 대사 : 메르켈을 지켜본 사람들은 그녀가 침착하고 강인하며 결코 싸움에서 물러날 타입이 아니라고 합니다.

▲ 의원 : 지금 현재로서는 기민당이 메르켈을 굳건하게 지지한다고는 하지만, 대연정이 유일한 해결책이고, 협상에서 양당이 타협점을 찾는다고 하면, 메르켈이나 슈뢰더 두 사람 때문에 연정이 실패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 메르켈이 걸림돌이 된다면 기민·기사당 연합 내에서 메르켈을 치고 올라올 인물은 많습니다. 슈토이버, 메르츠[16], 그리고 기라성 같은 주 총리들이 다 그 후보자들입니다.

3. 사민당과 좌파연합 간 연정 절대불가

▲ 대사 : 사민당으로서는 사민당, 녹색당, 좌파연합이라는 손쉬운 연정해결책이 있는데,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좌파연합과는 절대 연정을 안 할 것입니까?

▲ 의원 : 세 가지 점에서 3당 연정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연정방식은 우선 야당이 연방상원을 압도적으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작동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슈뢰더와 라퐁텐과의 개인적인 감정[17]의 폭이 너무 큽니다. 마지막으로 좌파연합과의 정책상 차이가 너무 큽니다. 대외정책분야에서 한 가지만 예를 든다면, 과거 공산당을 하던 사람들이 많아 반미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구요. 우리 사민당내에는 부시정권에 반대하는 사람은 있으나, 반미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을 찾기 힘듭니다.

또한 대부분의 좌파연합의 정책들은 실현가능성과 현실성이 전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도 어려운 사회복지제도를 더욱 늘리자는 것이 대부분인데, 재정적으로 실현불가능합니다. 그들의 정책은 환상일 뿐이고 인기주의에 영합한 주장에 불과합니다.

---

16) 기민당 의원으로 재정분야 전문가이며, 세금정책과 관련한 당내 의견차이로 2004.10 원내부총무 등 당직을 그만두었으나, 이번 총선시 키르히호프가 실책을 하는 바람에 메르츠가 다시 당내 재정분야 전문가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17) 슈뢰더, 샤핑(94년 사민당 총리후보)과 함께 사민당 3두체제를 이루면서 당내 좌파를 이끌었던 라퐁텐은 99.3.11 갑자기 재무장관직, 연방하원 의원직, 사민당 대표직 등 모든 공직의 사임을 발표하여 충격을 주었다. 현재까지도 그 확실한 이유에 대해서는 많은 설이 있는데, 총리실에서 그를 제거하려는 음모 때문이라는 설부터, 슈뢰더와 라퐁텐이 격한 다툼 끝에 총리를 제거하든지 내가 '구걸'을 그만두겠다고 라퐁텐이 다짐했다는 설(Frankfurter Rundschau지 보도)까지 매우 다양하다. 확실한 것은 중도좌파성향의 정책을 추진하던 슈뢰더와 (극)좌성향의 경제·제정정책을 주장하는 라퐁텐과의 동거는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사람들이 많았을 정도로 두 사람사이는 정책적인 이견이 심했다. 라퐁텐의 사임이 있고 난 후, 프랑크푸르트 증시는 순식간에 약 6%가 상승했고, '계획경제에 대한 시장경제의 제2의 승리'라는 말까지 돌기도 했다고 당시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4. 대연정이 유일한 해법

▲ 대사 : 의원님의 말씀대로라면 기민·기사당 연합이 포함되지 않은 연정은 이전 사민당·녹색당이 연방상원에서 맞이했던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정치상황의 귀결점은 대연정[18] 뿐인 것으로 이해되는데, 그렇다면 바로 양당이 대연정에 착수하지 왜 여타 소수 정당들과의 연정을 시도해 보는 건가요?

▲ 의원 : 양 정당이 다른 소수당과 연립정부 구성문제를 협의하였으나, 그것은 모든 가능성을 다 타진하고 노력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대외적인 쇼를 치른 것으로 봐도 크게 틀리지 않지요.

▲ 대사 : 현재의 교착상태를 깨뜨릴 가장 그럴듯한 방법으로 새롭지만 전통적인 지혜로서 소위 '글리니케 브릿지 해법'(Glienicke Bridge solution)[19]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방안에 의하면 슈뢰더와 메르켈 모두 스스로 후보직을 사퇴하거나 타의에 의해 배제된 채 대연정을 하는 것입니다.

▲ 의원 :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슈뢰더는 원래 물러날 의도였고, 기민·기사당 연합 내에서도 슈토이버나 메르츠, 그리고 기라성 같은 주 총리들이 반 메르켈 전선을 형성하여 이번 선거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어 메르켈을 당내 권력에서 밀어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 대사 : 한 의원은 본인과 면담 때 대연정 협상이 그리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세력이 비슷한 당이 서로 연정을 하면, 정책의 최대공약수를 찾아야 하는 막대한 정치적 노력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정책추진의 역동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 희생이 크지만 작은 정당과 연정을 하면 소정당은 정권에 참여하는 것 자체에 대해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정책적인 요구는 상대적으로 적어서 큰 정당은 그만큼 정책 운용에 있어 운신의 폭이 넓어지게 된다고 합니다.[20] 한 의원은 대연정이 안정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양 정당 의원의

---

18) 기민당 의원은 기민당과 사민당이 추진하는 정책의 약 50% 이상이 서로 유사하기 때문에 대연정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으나, 슈뢰더와 메르켈 두 총리 후보문제 해결은 원의 구적법 만큼이나 어렵다고 했다.(9.23 이수혁 대사 면담)
- 구적법(球積法) : 2천년 이상 수학자들을 괴롭혀 온 난제로 원의 넓이와 똑 같은 면적을 가지는 정사각형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다. 1882년 수학자 Ferdinand von Lindemann은 이 문제의 해결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처음으로 입증하였다. 따라서 구적법이란 처음부터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은유하는 표현이다.

19) '글리니케 브릿지' (Glienicke Bridge) : 베르린시와 포츠담시간 경계에 있는 다리로 과거 냉전시대 간첩 교환의 장소로 이용되었다.

20) 그러나 한 의원은 사민당을 정권 밖으로 내몰면 사민당, 좌파연합, 노조 등이 파업을 주도하는 상황이 되어 결국 정국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민당이 포함되는 대연정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으며, 그 예로서 동독에서 있었던 초대연정을 들었다.
'동독에서도 초대연정(超大聯政, super great coalition)이 있었습니다. 1990년 3월 18일에 있었던 동독

3/4 정도가 찬성을 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으며, 또한 많은 사람들은 대연정이 성사되더라도 과연 4년을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입니다.

▲ 의원 : 오늘 참가하고 온 사민당 의총에서도 거의 모든 의원들이 대연정을 찬성했고, 만약에 대연정을 한다면 4년을 지속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물론 임기 말이 되면 선거전에 돌입하면서 대결양상으로 발전하겠지만, 그때까지는 대연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녹색당의 피셔 외무장관이 평의원으로 돌아가겠다고 선거 후에 밝힌 것도 결국은 대연정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선거결과를 읽은 명석함이 아니겠습니까?

5. 재선거는 없다.

▲ 대사 : 만약 대연정이 아닌 소수 정부가 구성될 경우, 연방 대통령이 반대하여 재선거를 하게 될 개연성은 없는지요?[21)]

▲ 의원 : 재선거를 실시하려면 국민이나 정당 내에 재선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전혀 그렇지 않고, 재선거는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하고 투표율도 50% 이하로 떨어질 것입니다. 또한 각 정당 공히 재선거를 치를 수 있는 재정적 여력도 없는 상태입니다.

▲ 대사 : 늪에 빠진 사람이 자기 스스로 머리채를 잡아당겨서는 빠져나올 수는 없는 것[22)]이나 정치인들이 어떻게 현 정국을 잘 풀어갈지 궁금합니다.

내 총선후 드메지에 총리의 주도로 초대연정이 형성되었습니다. 기민당, DSU, DA, 자민당으로만 과반수 확보가 가능하였는데, 드메지에 총리는 녹색당과 PDS를 제외하고, 상기 4당과 사민당을 포함한 초대연정을 제안하였습니다. 드메지에 총리가 주장한 논리는 장벽붕괴로 인한 구동독체제의 혁신적인 대변혁과 동서독 통합이라는 역사적 도전을 앞두고 사민당을 정권에서 배제하면 의회 내에서 큰 분란이 있을 것이므로, 차라리 사민당을 정권에 참여시켜 정국을 안정화시키자는 것이었습니다. 각 당간의 격론을 내각 내로 한정하여 의회까지 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생각이었죠. 의회에서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국민들을 안정시키고 통합시키자는 생각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동 초대연정은 성공하였습니다.'

21) 연방총리 선출단계(선출에 실패할 경우 다음 단계로 넘어감)
1단계 : 연방대통령의 총리 후보 제안에 따라 재적 과반수의 지지로 선출
2단계 : 전체 연방하원 의원 1/4 이상의 제안으로 재적 과반수 지지로 선출
3단계 : 상대적 다수의 지지로 선출
- 대통령은 동 총리를 정식 임명하거나 새로운 총선 실시를 선언

22) 18세기 말 독일의 Baron Muenchhausen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익살꾼이었는데 그의 익살 중 하나는 "나는 전쟁 중에 귀환하던 중, 늪지에 빠졌으나, 내 머리채를 내가 스스로 잡아당겨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하였다. 정치권에서 사용되면서 그 뜻이 부정적으로 변하여 정치가를 가리켜 "그는 Muenchhausen처럼 말한다."고 하면 전혀 현실성이 없으며 표를 얻기 위해 감언이설을 일삼는 거짓말꾼이라는 말이 된다.

6. 과거의 대연정 평가

▲ 대사 : 1966년 키징어(Kiesinger)와 브란트(Brandt) 사이의 대연정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요? 또한 독일의 역사에서 가장 정치적인 혼란이나 격동기가 있었다면 그것은 언제였는지요?

▲ 의원 : 지금과 비교하면 위기라고도 볼 수 없는 위기를 극복하고자 1966년 대연정이 구성되었지만, 정작 그 위기를 완전히 극복한 것은 대연정이 끝나고 사민·자민당 정권이었습니다. 당시 키징어와 브란트 간에는 파트너다운 파트너관계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브란트에 비해 키징어의 힘이 압도적으로 컸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국민들 사이에는 20년이나 지속된 기민· 기사당 연합 정권[23]에 대한 정권교체의 열기가 폭넓게 퍼져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1%의 마르크화 절상문제로 대연정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역사에서 가장 정치적 대립이 심했던 시기는 적군파가 활발히 활동했던 슈미트 정권 때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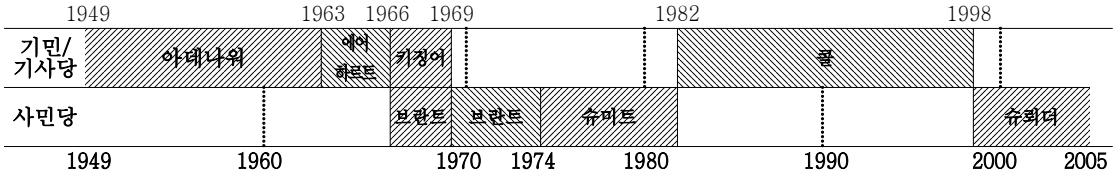
7. 대연정의 장단점

▲ 대사 : 기민당의 한 의원은 대연정을 하게 되면 정책상의 이견이나 갈등을 내각 내에서 해소하여 의회에서는 통일된 타협안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보여주게 되고, 이를 통해 화합과 정책실행력을 높일 수 있다[24]고 하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의원 : 확실히 그런 면이 있지요. 큰 장점입니다. 반면 우리 사민당으로서는 약간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대연정이 갖는 가장 큰 위험요소는 현상에 불만인 일부 유권자들이 극우나 극좌세력 같은 극단적인 세력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극우세력보다는 극좌세력으로 갈 가능성이 많은 만큼 우리 사민당이 가지는 부담이 적지 않다고 봅니다.

---

23)



24) 2005.9.23 한 의원, 이수혁 대사와의 면담시 언급, 각주 21) 참조

▲ 대사 : 정치적 림보로 불리는 이 결과를 가져온 조기선거는 슈뢰더의 정치적 도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슈뢰더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스릴 만점의 역화(逆火, backfire)를 일으켜 실업과 경제침체에 씨름하고 있는 나라에게 가능한 것 중에는 가장 최악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기도 합니다. 총리선출이 늦어지고, 또 약체 정부가 들어서면 경제회복은 정말 어렵게 된다고 걱정들 합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탈리아는 9개월간 정부를 구성할 수 없었는데도 경제가 아주 호황을 누렸듯이 총리선출이 늦어지더라도 경제에 별 영향이 없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 의원 : 개인적으로는 총리선출을 지체하는 것은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 목차로

Ⅳ. 독일의 정치 이념, 행태 분석

1. 독일 정치에서 이념의 문제

▲ 대사 : 이번 총선과 관련하여 한 언론은 독일에서 더 이상 계급투쟁은 없으며, 한때 '계급투쟁'이라고 불렸던 것이 이제는 사회적 시장경제의 미래에 대한 투쟁으로 바뀌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투쟁은 노동과 자본 간의 투쟁이었으나, 이제는 경제 체제의 개혁을 위한 신 자유주의적 경제의 해법에 관한 분쟁이라는 것이죠. 얼마 전 제가 만난 폰 바이체커(von Weizsaecker) 전 대통령도 노사문제와 사회보장정책 등에 여러 대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사회적 시장경제의 본질에 대한 회의 같은 이념적 요소는 없으며, 다만 가능성과 한계(possibility and limit)에 관한 문제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양대 정당들의 정책적 스펙트럼을 비교해 볼 때 서로 상당 부분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기민·기사당과 사민당이 정책면에서 유사점과 차이점[25]은 무엇인지요.

▲ 의원 : 연금, 의료보험, 노사공동결정제도, 해고보호완화, 연방제 개혁 등에서 충분히 타협이 가능할 정도로 정책적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터키의 EU가입 문제[26]를 제외한 대외정책 등에서도 충분히 타협이 가능합니다. 현재 좀 힘들어 보이는 분야로는 에너지(핵발전소)문제, 노사임금자율협상, 세제정책, 교육제도 등을 들 수 있으나 대연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이 또한 타협이 가능하다고 봅니다.[27]

그리고 양당은 자유, 정의, 연대라는 세 가지 기본가치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민당이 국내치안, 가족 및 경제정책 등에서 사민당에 비해 약간 보수적이고 종교를 중시한다는 점 등이 다르지요. 당 대 당으로 볼 것이 아니라 당내의 각 정파를 자세히 살피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대사 : 한 기민당 의원도 며칠 전 제게 양당 간에 커다란 이념, 원칙의 차이는 없으나, 관념상 기민당은 더 많은 복지축소, 기업보호, 그리고 사민당은 못가진 자 편이라는 인식이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번 선거에서 노동자들이 개혁을 추진하는 사민당에 불만을 품고 기민당측에 투표할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떠오른 좌파연합으로 몰린 것 같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 사민당 및 기민당 양당이 상호 공유하는 이념 또는 정책적 분야를 수치화한

---

25) 기민당의 한 의원은 '양 정당의 정책 내용이 대동소이 하며, 양 정당 정책의 차이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슈뢰더(Schröder) 총리 및 뮌터페링(Münterfering) 당수 등 사민당 지도부는 경제개혁 프로그램인 Agenda 2010을 현 상태로 지속적으로 추진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인 기민당은 개혁의 방향은 올바르지만, 개혁의 강도에 있어 Agenda 2010보다 더 심도 있는 개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9.23, 이수혁 대사와의 면담)

26) 사민당은 터어키의 EU 정회원국 가입을 지지하고 있으나, 기민· 기사당 연합은 정회원국 자격부여는 힘들고, 특별 동반자 관계(privilegierten Partnerschaft)만을 인정하겠다는 입장이다.

27) 기민당 및 사민당의 주요 정책 비교는 첨부 1(기민당-사민당 공약 비교) 참조

다면 어느 정도가 될까요?[28]

▲ 의원 : 어려운 질문이지만, 양당은 어림잡아 50% 이상이 겹친다고 보면 무난할 것[29]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양당이 추구하는 목표는 매우 비슷합니다. 다만, 목표에 도달하는 수단과 방법상에서 차이를 보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기민·기사당 연합은 일자리 창출과 재원마련을 위해 부가세인상을 주장하지만, 사민당은 일자리 창출과 재원마련이라는 목표는 추구하지만 당장 부가세 인상을 통해 해결하자는 방법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식입니다.

2. 독일의 자유주의 논쟁

▲ 대사 : 미국이나 영국의 평론가들은 독일 사람들이 자유주의적 사고에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독일의 자민당 정치인이었던 다렌도르프(Dahrendorf)[30]같은 분은 독일의 자유주의[31]에 대해 실망하여 영국으로 귀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독일이 자유주의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요.

▲ 의원 : 다렌도르프가 영국에 귀화할 당시는 플라흐(Flach) 자민당 사무총장, 쉘(Schell) 전 연방대통령(자민당 출신) 등이 자민당의 주요 인물이었는데, 이들은 전부 좌파적 자유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자유주의는 완전히 극단적인 개인주의로 변모했습니다.

▲ 대사 : 좌파적 자유주의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 의원 : 당시 사회적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지요. 슈트라우스(Strauss) 바이에른

---

28) 연방하원 중도성향 비율(2002 : 77%, 2005: 69.5%)

2002년 선거	민사당 4.0	녹색당 8.6	사민당 38.5	기민·기사연합 38.5	자민당 7.4
2005년 선거	좌파연합 8.7	녹색당 8.1	사민당 34.3	기민·기사연합 35.2	자민당 9.8

29) 기민당의 한 의원도 이와 비슷한 주장을 하였다.(9.23 이수혁 대사- 한 의원 면담)

30) 1929년 제국의회 사민당 의원인 Gustav Dahrendorf의 아들로 태어나 막스주의로 철학박사학위, 후에는 사회학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대학에서 사회학교수로 활동하였다. 사민당에서 자민당으로 당을 바꾼 후 빌리 브란트 총리하에서 외무부 정무차관(69-70년)을 지내기도 했고, 이후 유럽연합의 집행위원을 역임하기도 했다. 자유주의의 선구자로 알려진 그는 당시 Karl-Hermann Flach 자민당 사무총장과 함께 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에 걸쳐 자민당의 실용적인 노선수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당시 68세대와의 토론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서 명성을 떨쳤지만, 그의 반대세력들은 Dahrendorf가 잘못된 아량과 환심사기 성향을 보였다고 비판한다. 현재 영국으로 국적을 옮긴 그는 영국의 상원의원이며, 1993년 영국황실로부터 Baron Dahrendorf of Clare Market이란 귀족칭호를 수여받았다.

31) Dahrendorf 경은 영국은 '제도적으로 자유주의'이며, 독일은 '제도적으로 사회민주주의'라고 하였으며, 철학자 Oswald Spengler는 한 발 더 나아가 "독일에는 좋아할 수 없고, 불명예스러운 여러 주의(주장)들이 있는데, 독일에서 자유주의만큼 경멸시 되고 있는 것은 없다."라고 하였다.

주총리 등 당시 집권당인 기민·기사당 연합 세력은 심문권 강화, 국민 호구조사(Volkszaehlung) 등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고 했지요. 그때 자유주의자들의 주된 관심은 바로 이러한 시민적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소위 말하는 극단적인 개인주의를 내세우는 완벽한 자유주의를 반대했습니다. 사유화, 민영화 등을 옹호하는 동시에 사회주의적인 요소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경향이 있었지요. 이러한 사회주의적 요소 때문에 좌파적 자유주의라고 불렸습니다.

지금은 자유주의자들이 연금보험, 의료보험 등 여러 가지를 다 자유화하자고 주장하지만, 다렌도르프 당시에는 그러한 극단적인 개인주의 성향의 자유주의자들이 아니었습니다.

▲ 대사 : 독일의 자유주의자들과 정당과의 관계[32]를 보면 먼저 1960년, 1970년대에는 자민당이 자유 상인들로부터 진보적인 학생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류의 자유주의자들이 선택하는 정당이었으나, 1982년 자민당이 사민당과 연정을 파기하고 기민당과 손을 잡았을 때 중도 좌파 지지자들을 잃게 되고, 기업을 위한 압력단체로 비추어 지기도 했습니다.

이후 자유주의자들의 확실한 피난처는 사민당, 이어서 녹색당으로 이어졌는데, 오늘날 놀랍게도 자유주의자들의 지지표를 획득하기 위한 새로운 큰 경쟁자는 오랫동안 독일의 신중하고, 합의에 의해 추진되어 온 사회복지 자본주의의 제1의 옹호자였던 기민당입니다. 2003년도 10월 'Quo Vadis Germany(독일이여 어디로 가시나이까)'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메르켈은 의심스럽기는 하지만 자신을 자유주의를 우선시하고, 자유주의적 요소를 국가 경제에 더 반영하려는 인물로 소개하기도 했지요.

3. 독일의 보수주의는 죽었는가?

▲ 대사 : 미국 보수주의 싱크탱크인 ASPEN의 베를린 사무소장은 "경제문제에 관해, 소위 말하는 보수주의자들은 어디에 자리하고 있는가? 누가 경제문제에서 보수주의를 대표하는가?"라고 독일의 보수주의에 대해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슈피겔지는 독일은 항상 정치적 보수주의(political conservatism)에 대해 미국 또는 영국과 다른 개념을 가져왔으며, 바이마르 시대의 보수주의자들이 나치와 연합함으로써, 독일의 보수주의는 치명적인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32) 독일 자유주의자들과 정당과의 관계는 첨부 3 (황야에 버려진 자유주의자들, The Economist 8.27일자) 참조

이와 관련하여 기민당 중견 정치인인 쇼이블레는 2002년 '독일 보수주의 신조'라는 문건에서 "인간의 원죄에 대한 인식 때문에, 그러나 또한 20세기 독일사에서의 역사적 실수와 일탈에 대한 우리의 심오한 깨달음 때문에 우리는 족쇄가 풀린 개인주의에 대해 회의적이다"라고 할 정도로 독일의 우익 또는 보수는 사실 색깔이 묽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에서 기민당은 기대보다 훨씬 낮은 30%대의 지지율을 얻는 데 그쳤습니다. 슈피겔지는 이번 선거 분석에서 좌파성향의 득표율은 51.5%에 이르는 반면, 순수 보수성향의 득표율은 9.8%에 불과하여 독일에서는 보수주의는 종말을 고하였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독일에서 보수주의는 과연 종말을 고하였습니까?

▲ 의원 : 독일의 보수주의를 가치 지향적 보수주의와 제도적 보수주의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가치지향적인 보수주의는 독일인의 전형적인 가치로 알려진 근면, 정직함, 깨끗함, 규율, 시간준수 등을 지키자는 것인데, 이러한 보수주의는 현재 모든 당에 널리 분포되어 있지요. 그런데 제도적 보수주의는 가족정책, 남녀 평등문제, 동성애 문제에 대해 가지고 있는 보수적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보수와 진보의 구분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데, 핵발전소 문제, 유전공학, 개인정보 문제 같은 분야는 오히려 보수주의가 찬성하고 진보진영에서는 반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에는 전혀 그 반대였지요.

▲ 대사 : 정치적 이념을 보수와 진보로 양분해서 본다면, 흔히 기민·기사당 연합을 미국의 공화당과, 사민당을 미국의 민주당과 비슷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독일의 기민·기사당 연합과 사민당 둘 다 민주당과 더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 의원 : 우선 양국은 상이한 정당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독일은 당원들이 전당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책을 마련하고, 이 정책의 실행을 위해 당원들과 의원들이 단결하는 정책 정당제도를 가지고 있는 반면, 미국의 정당은 그러한 의견수렴절차 없이 단지 의사를 전달하는 역할에 그치고 맙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소속정당과 관계없이 의원이 개별적으로 제도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찬성과 반대(cross voting)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독일에서는 cross voting은 흔하지 않습니다.

지난 55년 동안 독일의 양 국민정당은 기본정강과 정책을 견지하면서 이를 토대로 선거정책을 마련하는 가운데 변모해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각 정당의 정책들이 자연스럽게 비슷하게 발전해왔습니다.

▲ 대사 : 보수진영에 속하는 자민당, 그리고 진보진영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녹색당, 좌파연합을 지지하는 부류는 대체로 어떠한 계층인가요?

▲ 의원 : 좌파연합을 지지하는 사람은 구 공산당 계열인 민사당, 일부 불만족스러운 사민당 출신, 강성 노조 출신 등입니다.

그리고 녹색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주로 환경주의자, 평화주의자, 고소득층 여성 등입니다. 한편, 자민당 지지자들은 변호사, 의사, 건축가 등 주로 전문직 종사자들입니다.

참고로 한 고소득 가정에서 여성은 주로 녹색당을, 남성은 자민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대사 : 고소득 여성이 녹색당을 지지하는 특별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의원 : 고소득 여성은 일단 돈도 있고, 생각도 한결 자유롭고, 무언가 환경과 평화문제를 더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에피소드를 말씀드리자면, 러시아 혁명 때 시베리아 농민들은 비록 1루블의 혁명세를 납부하기는 하지만 제발 자기 마을에는 혁명이 없었으면 하는 희망을 가졌다고 합니다.

4. 정책의 본질과 관계없는 유권자의 선거행태 : 견제와 균형[33]

▲ 대사 : 지난 5월 22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지방선거에서 기민당이 사민당을 누르고 승리했는데, 불과 100일 후 실시된 연방하원 선거에서는 이 주에서 사민당이 기민당보다 많은 지지율[34]을 획득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유권자들이 지지 정당을 옮겼나요?

▲ 의원 : 5월의 지방선거 때에는 전국적으로 사민당에게 불리한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퍼져 있었는데 이 점이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는 슈뢰더와 메르켈 간, 사민당과 기민당 간의 대결로서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사민당의 슈타인브뤼케(Steinbruecke) 주총리가 개인적으로 인기가 많았지만 그래도 당선되지 않았습니다. 바꿔보자는 분위기가 팽배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33) 한 의원은 독일 선거의 역사적 행태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2차대전 이후 독일 정치사를 보면 연방 및 지방 차원의 선거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습니다. 연방차원에서 한 당이 승리를 하면, 유권자들은 견제와 균형의 차원에서 주정부 차원에서는 그 반대당을 지지해 왔지요. 만약 메르켈이 총리가 되면 다음 지방선거에서는 사민당이 득세할 것이 분명합니다"(9.23 이수혁 대사 면담)

34) 5.22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의회 선거 결과 : 사민당 37.1%, 기민당 44.8%
9.18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지역 연방하원 선거 결과 : 사민당 40.0%, 기민당 34.4%

이번 연방하원 선거에서는 양당의 정책비교를 통해 국민들의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조기총선 시 기민·기사당 연합의 정강 정책에는 정서적인 온화함이 결여되었습니다. 슈토이버는 선거 후 이를 공개적으로 인정하였지요. 메르켈이 자신의 정강정책에 확신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정책을 국민들을 상대로 팔기 위해서는 정책에 정서적인 온화함을 입혀야 팔리는 법입니다. 극단적인 개인주의를 주장하고 모든 것을 민영화하자고 주장하는 자민당의 정강정책에는 정서적인 온화함이 없어도 이해가 되지만, 국민정당인 기민· 기사당 연합이나 사민당의 정책에는 온화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양당의 정강정책을 비교해 보니, 기민· 기사당 연합의 정책이 나은 게 별로 없다고 국민들이 판단한 겁니다.

▲ 대사 :일부 정치평론가는 독일정치에서 정당의 정강보다는 정치 지도자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 의원 : 그 의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슈뢰더의 인기 때문에 사민당의 지지율이 오르락내리락 하기도 합니다만, 꼭 그러한 것만은 아닙니다. 예컨대 1982년 슈미트 총리의 국민적 인기는 매우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도자는 당의 기관차일 수는 있지만 하지만 당에 대한 지지가 지도자와 늘 상관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좌파연합은 라퐁텐(Lafontaine)과 기시(Gysi)[35]의 개인적 역할 때문에 약 2-3% 정도 표[36]를 더 얻은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 대사 : 영국 가디언지는, 독일인의 비관주의, 거대한 국민정당에 대한 환멸,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지만 이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지금과 같은 선거결과를 가져왔다고 분석하였습니다.

▲ 의원 :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5. 선거제도 문제 - 작은 것은 아름답다

▲ 대사 : 이번 총선 후 정국이 어지러운 것은 독일의 선거제도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독일 선거제도는 2개의 큰 국민정당과 1개의 소수정당이 가장 안정적이고 효율적이지만, 군소 정당이 3개가 되면 양대 국민정당의 과반수 확보가 어렵고, 연정구성도 어렵게 되어 교착상태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있지요.

35) 구 동독 공산당 후신인 민사당(PDS)의 전 당수로 라퐁텐과 함께 이번 선거에서 선전하여 좌파연합이 8.7%를 득표하였다.
36) 9.18 조기 총선에서 좌파연합은 8.7% 득표(613석중 54석)

금번과 같은 선거결과로 볼 때 앞으로 군소정당이 난립할 경우 문제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던데요.

▲ 의원 : 군소정당이 늘어 과반수확보가 복잡해졌다는 기술적인 변화는 인정하지만, 그러한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선거제도는 나름대로 약점이 있고 독일 선거제도도 약점이 있겠지요.

일전 영국 의원을 만났는데, 영국 웨일즈라는 지방정부는 우리 선거제도를 도입하려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독일 선거제도의 장점은 정당에 대한 지지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한다는 것이지요. 예컨대, 48% 정도를 득표해 놓고도 어떤 선거제도 아래에서는 그에 합당한 것보다 훨씬 많은 의석을 또는 훨씬 적은 의석을 가져갈 수 있지만 독일의 선거제도는 있는 그대로 가져갑니다. 현재로서는 어느 누구도 독일 선거제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 대사 : 이번 선거에서 군소정당들이 얻은 득표율(26.6%)[37]을 두고 독일 유권자들이 보여준 선택은 '작은 것은 아름답다'는 것으로 평가[38]되기도 합니다. 독일의 정당명부제 같은 선거제도로 인해 군소정당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져갈 것이라고들 합니다. 모든 분야를 다루어야 하는 국민정당과는 달리, 군소정당들은 몇몇 분야에 특화함으로서 일부 국민들의 관심과 인기를 끌어오기가 훨씬 용이하다는 점이지요.

▲ 의원 :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연정을 하게 되면 현 상황에 불만인 일부 유권자가 극우나 극좌세력 같은 극단적인 세력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나 극우보다는 극좌세력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서 사민당이 가지는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 목차로

37) 자민당(9.8%, 2002년 7.4%), 좌파연합(8.7%), 녹색당(8.1%, 2002년 8.6%)
38) 독일의 국제방송인 Deutsche Welle의 분석

(첨부 1)

사민당과 기민/기사연합의 선거공약 비교

분야	세부항목	사민당(SPD)	기민당(CDU)/기사당(CSU)
조세·재정	소득세	○부유세 도입: 연 25만 유로 이상 고소득자에 3% 추가 징수	○부유세 도입 반대 - 대신 고소득자의 절세 차단대책 마련 ○세율 인하 최고세율 42%→39% 최저세율 15%→12% 인하
	부가가치세	○현행 16% 유지 - 소비 침체 우려	○16%에서 18%로 2% 인상
	기업세	○법인세율 인하 : 25%→19%로 인하	○법인세율 인하 : 25%→22%로 인하
	보조금	○공휴일 및 야간특근수당 면세 규정 유지	○특근수당 과세 ○장거리통근자교통수당 인하 ○내집 마련 보조금제도 폐지
	기타	○중소기업 대출이율 인하 : 시중 금리보다 2% 인하 ○주택개보수비용의 20%(최대 600유로) 를 2년간 소득세에서 공제	○상속세 조정 : 기업 상속후 10년 이상 지속 경영시 상속세 면제
노동	실업급여 실업보험	○하르츠IV(실업급여II) 조정 신연방주의 급여수준 동일화 ○고령 장기실업자에 대해 실업급여II 상향 조정 검토	○하르츠IV 개선 추진 ○실업급여 I 조정 실업보험료 납부 기간에 따라 수령기간 조정 추진 ○실업보험요율 인하 현행 6.5%→4.5% 인하
	해고보호제도 노사자율교섭 공동결정제도	○현행 유지	○20인 이하 사업장의 신규채용시 해고보호법 미적용 ○산별단체협약과 다른 개별사업장단위의 협약 체결 가능
	임금 최저임금제	○전업종에 산업별 최저임금제 도입 유도, 실패할 경우 법정 최저임금제 도입 ○임금인상 억제정책 재검토	○실업급여 II 수령자 채용시 최초 2년간 단체협약상 기준보다 최대 10%의 저임 가능 ○콤비임금(Kombi-Lohn) 도입 : 저숙련근로자 채용시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

분야	세부항목	사민당(SPD)	기민당(CDU)/기사당(CSU)
의료 · 연금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도입 : 전국민을 의무가입 대상으로 하고, 소득(연금 및 자본소득 포함)에 따라 기여율을 차등 적용 ○공보험-사보험 일원화	○공보험-사보험 유지 ○공무원 등의 특수보험 유지 ○건강프리미엄제도 도입 : 모든 피보험자는 동일한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 대신 고용주 부담률(50%) 인하
	요양보험	○점진적으로 국민요양 보험화	○고용주의 요양보험료 부담률 동결
	연금	○실질수령연령을 법정수령연령 65세로 상향	○수령연령 상향 고려 ○추가 개인연금보험 지원제도 대폭 간소화
가족 · 출산 장려	지원대책	○부모급여(Elterngeld) 신설 : 출산 후 육아휴가를 낸 부 또는 모에게 1년간 부모급여를 지급 ○공공보육시설 무료화 추진	○자녀보너스제도 도입 : 2007.1.1일 이후 출생아에 대해 12세까지 부모의 연금보험료 납부액에서 50유로를 공제 ○자녀포함 1인당 과세공제액을 1인당 8000유로로 확대
	기타	○가정생활과 직업의 조화 강화	○탁아시설 확충
교육	대학	○대학수업료 미징수 및 학자금 지원제도(Bafög) 유지 ○우수대학 육성책 지속 추진	○수업료 미언급 ○교육 및 연구개발투자 확대
	기타	○全日制 학교 확충 ○보육시설에도 교육표준 도입	○교육기회의 평등원칙 언급
에너지 · 환경	원자력 및 재생가능에너지	○원자력발전 폐기정책 지속 ○지속가능에너지 확대	○원자력발전 폐기정책 재검토 ○원자력발전소 운전연한 연장 ○재생가능에너지의 비중의 전력소비량의 12.5%로 확대
	기타	○석탄보조제도 폐지 ○에너지절감대책 강화 ○교통인프라 확충	○풍력 및 태양에너지 관련 보조금제도 폐지 ○환경세(Ökosteuer) 유지
대외정책		○터키의 EU 정식회원 가입 지지 ○분쟁예방, 평화외교 강조 ○국제기구에서의 독일의 적극적 역할 수임(UN 상임이사국 진출 추진 등)	○터키의 EU 정식회원 가입 반대 - '특별파트너'(Privileged Partnership)로 대우 ○대러시아 정책에서 중동구 국가들의 입장 고려 ○대서양 양안관계 강화 : EU 통합과 미국과의 파트너쉽 조화

☞ 목차로

(첨부 2)

슈뢰더 총리 기자회견

(조기총선 제안)

2005년 5월 22일

독일은 현재 심층적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독일이 분단의 극복이라는 특수한 조건 하에서 21세기가 요구하는 조건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Agenda 2010이라는 개혁을 통해 결단력 있게 올바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사회보장체제의 미래를 확고히 하고, 독일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필수적인 조치들을 실행했습니다. 이런 조치들은 독일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불가피한 조건들입니다. 간과할 수 없는 성과들이 벌써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일련의 개혁들이 가져오는 긍정적 효과를 우리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으로 감지하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정책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州 선거에서 저희 사민당이 쓰디쓴 패배를 당함으로써 우리가 이런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실행해 나가기 위한 토대가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필수적이라고 믿고 있는 개혁의 지속적 실행을 위해서는 바로 지금, 독일 국민 다수가 보내주시는 절대적 지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독일 연방공화국의 총리로서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즉 현실적으로 보아 올해 가을에 독일 연방하원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연방대통령께서 기본법이 보장하는 가능성을 활용해 주시도록 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저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끝.

☞ 목차로

(첨부 3)

쾰러 대통령 TV담화문
(조기총선 결정)

2005년 7월 21일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금일 제 15대 독일연방의회를 해산하고, 조기총선을 다가오는 9월 18일에 실시한다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걸려있는 막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에 달하는 이들이 수년째 실업자로 전락하여 생활하고 있으며, 연방 및 주 정부 재정 또한 전례 없이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자긍심을 가졌던) 연방 질서가 이제 힘에 부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속적인 출생률 감소와 고연령화라는 이중고를 안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치열한 세계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는 국정목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강한 정부가 필요합니다. (주지하다시피) 안정된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다수당에 의한 연방의회 장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연방총리는 연방의회에서 간신히 다수를 점하고 있는 현 의회구조로는 안정적인 정책을 펴나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는 취지를 지난 7월 1일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당의) 노선(지침)에 따르지 않고 독자적인 행보를 하거나 아예 (교섭단체에서) 탈퇴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 터에 나온 것입니다.

정부여당 측에서 (연방총리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하고 있지만, 연방총리로서는 난제에 직면하여 장기적인 임무수행에 있어서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봅니다. 정부여당의 원내 교섭단체 의장 또한 연방총리의 이 같은 상황판단이 옳은 것으로 (저에게) 전언하였습니다.

(연방총리 의회해산 요청 발표 이후) 지난 수 주간 많은 이들이 이(의회해산) 조치가 불러올 파장, 무엇보다도 헌법절차 상의 문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으며, 이는 본인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달리 보면, 이는 우리 국민들이 기본법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으로서 반가운 일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 헌법은 지난 50여 년 이상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유지하는데 그) 근간이 되어 왔습니다. 기본법(제 68조)에 의하면, 의회해산(조기총선)은 충분하고 합리적인 근거로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예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본법은 조기총선을 유도할 목적으로 연방총리가 의회 (불)신임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독일연방 역사상 1972년(빌리 브란트 총리)과 1983(헬무트 콜 총리)년에 이미 적용된 바 있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연방총리의 불신임안 가결 자체가 곧 의회해산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연방헌법재판소에서 판시한 바로는, 이를 위해서는 연방총리가 과반수 의석 확보로 안정적인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현저한 차질이 있을 정도로 연방의회에서의 근본적인 정당구도의 변화가 생겼을 때에만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 연방총리는 이 같은 전제조건이 충족된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연방총리의 이 같은 중대한 결정을 본인 또한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주요 정치인 및 법률 전문가들과도 수 차례 상의를 마쳤으며, 특히, 회담, 서한 및 이메일 등을 통해 소중한 견해를 보내준 국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사의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지난 1983년 연방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연방대통령은 연방총리의 (의회장악 실패라는) 상황판단을 달리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혹시나 있지나 않은지 주도면밀하게 검토할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특히 우려하시는 분들의 견해를 충분히 존중하여, 이를 경청하며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연방총리의 판단이 옳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연방의회 해산을 위한 전제조건을 예시하고 있는 헌법을 준수한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기본법에 명시된 연방대통령의 의무에 근거하여, 이제 새로 총선을 실시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모든 것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저는 조기총선이 국민 여러분의 이해에 가장 부합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가의 주권인 국민 여러분이 국가의 정치를 판단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로써 저는 여야를 막론한 각 정당에 대하여 (현재 우리 독일이 처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을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저는 우리 독일 국민들이 자유를 보장하고, 현대적 사회복지국가를 지속적으로 형성해 갈 수 있는 재능과 능력이 있는 것으로 굳게 확신하는 바입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최종결정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정확히 살펴보고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라 함은 여러 정책대안에서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선거권을 신중하게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끝.

☞ 목차로

(첨부 4)

황야에 버려진 자유주의자들(Liberals in the wilderness)

부제 : 독일 자유주의자들은 마땅한 고향집이 없다

The Economist 8월 27일자

자유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9월 18일 총선에서 어떻게 투표를 할 것인가? 응답자의 자유주의가 국가의 최소간섭주의에 기초한 경제적 자유주의인지 또는 비전통적인 생활태도를 반영하는 사회의 다양성을 의미하는 것인지 간의 매우 어려운 질문이다. 네 정당들은 자유주의들의 동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자민당의 자칭 자유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어느 누구도 자유주의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국가로서의 독일은 자유주의 사고에 대해 특별히 호의적이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역설적이다. 19세기 독일 통일은 자유무역의 이상과 공민권의 보호자로서의 국가를 반영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자유보다는 보호가 우선시 되는 풍조이다. 영국의 귀족이 된 전 자유주의 정치가이자 학자인 Ralf Dahrendorf 경은 그가 선택한 영국은 “제도적으로 자유주의적”인 반면 독일은 “제도적으로 사회 민주주의적”이라고 말한다. 권위주의에 관한 철학자 Oswald Spengler는 한발 더 나아가 “독일에서는 좋아할 수 없고, 불명예스러운 원칙(주의)들이 있는데, 독일에서 경멸까지 받는 것은 오직 자유주의”라고 역설하였다.

여러 부류의 자유주의자들은 결국 여러 정당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경향이 있다. 시민적 자유를 옹호하는 정치인들은 특별히 경제와 금융 분야에는 관심이 없다. 이러한 분야는 자기의 영역을 벗어나서는 생각할 줄을 모르는 전문가들에게 대부분 맡겨진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적 자유주의를 권위있게 종합하여 보는 정치인들은 매우 희귀하다.

Dahrendorf 경과 같은 사람들이 1960년과 1970년도 사이에 정치를 하고자 했을 때 자민당(FDP)은 자유 상인들로부터 진보적인 학생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류의 자유주의자들이 선택하는 정당이었다. 그러나 1982년 자민당이 사민당과 연정을 파기하고 기민당과 손을 잡았을 때 중도 좌파 지지자들을 잃게 되고, 기업을 위한 압력단체로 비추어 졌다.

자유주의자들의 확실한 피난처는 사민당이 되었으며, 특히 슈뢰더가 하루살이로 끝난 토니 블레어의 제3의 길의 독일판이라 할 수 있는 신중도를 주창하였을 때 자유주의자들은 사민당을 찾았다. 그러나 이 주장이 호소력이 약해짐에 따라 좌파적 자유주의자들의 더 믿음직한 피난처는 녹색당이었다.

녹색당이 추구하는 높은 세금정책은 반자유주의적 색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녹색당의 지도자들, 주로 현 연정에 참여하고 있는 장관들은 인상적으로 효율적이고 실용주의적이다. 그들은 적어도 이론상, - 비록 권좌에 있는 동안 누덕누덕 부분적인 분야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홀대되어 온 시민적 자유주의의 대의명분을 옹호하고 있다.

그러나 FDP는 확실한 기반을 구축하려고 한다. FDP강령은 사생활과 시민적 자유를 많이 담고 있으며, 세금 단순화, 경쟁력 제고를 강조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더 많은 권리를 부여하는 한편, 관료들에게는 적은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연정을 기초로 한 독일의 정책이라는 것은 정당의 선거 정책보다는 정치인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것이 FDP의 가장 큰 취약점이다. 당 지도자 Westerwelle는 2002년 선거에서 우파적 파퓰리즘으로 장난을 쳤지만, 이제는 때늦고 설득력은 없지만 시민적 자유의 대의명분의 옹호자로 전향하였다. 그리고 서류상으로 FDP의 자유주의는 자민당 지지층의 중심을 이루는 건축가, 약사, 의사 등 안정된 직업군들에 상처를 주는 것을 피하고 있다.

놀랍게도 자유주의자들의 지지표를 획득하기 위한 새로운 큰 경쟁자는 오랫동안 독일의 신중하고, 합의에 의해 추진되어 온 사회복지 자본주의의 제1의 옹호자였던 기민당이다. 2003년도 10월, “Quo Vadis Germany(독일이여 어디로 가시나이까)”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Angela Merkel은 의심스럽기 하지만 자신을 자유주의를 우선시하고, 자유주의적 요소를 국가 경제에 더 반영하려는 인물로 소개했다.

문화적으로도 Merkel은 기민당 내에서 혁명적 위치를 대변하고 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녀와 같은 경력을 갖는 정치인이 총리 후보가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다. 서독을 이끌어온 카톨릭·가족·남성 중심의 그룹에서 동독출신으로 신교도이면서 아이가 없는 그녀는 단연 눈에 뜨일 수 밖에 없다. Merkel이 당수로 있는 동안, 열린 사고를 가진 젊은 정치인들이 유력한 지위로 성장하였다. 기민당은 심지어 동성연애자 퍼레이드의 후원자로서 귀걸이를 하고 다니는 어느 한 주정부 장관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민당의 정치는 이민문제와 시민적 자유 문제에 대하여는 결코 자유주의적이 아니다. Merkel이 최근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Paul Kirchhof를 자신의 예비 내각 재무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바로 CDU의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Kirchhof는 25% 일괄 소득세를 주장하는 진보적인 개혁주의자이다. 그러나 당의 유력한 지도자들인 각 주정부 총리들은 그 계획을 단지 장기적으로만 실행할 수 있는 견해라고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다. Kirchhof의 정책적 견해는 대부분의 자유주의자들을 재촉하여 떠나게 하고 있다. 그는 남편이 밖에서 돈을 버는 동안 엄마들은 가정주부로서 집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갈 곳이 없는 독일의 자유주의자들은 누구에게 투표를 할 것인가? 아마도 대다수 사람들이 CDU를 선택할 것이며 녹색당은 그 다음일 것이다. 이러한 국민의 성향을 감안하여 볼 때 자유주의들은 FDP와 CDU연정쪽으로 저울질 할 것이며, 이러한 결과는 여론 조사 결과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당수의 자유주의자들은 매력적이기는 하지만 실현가능성이 별로 없는 CDU와 녹색당과의 연정도 내심으로는 희망해 보고 있다.

동독출신의 물리학 교수였던 Merkel과 서독출신으로 택시기사였고, 돌맹이를 던지며 데모를 했던 녹색당의 냉혹하고 진보적인 Fischer가 어울릴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혹시 다음 기회에 Merkel과 녹색당의 다른 지도자가 독일의 자유주의자를 위한 드림팀을 구성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만약 그것이 실패한다면, 항상 Dahrendorf경과 같은 예도 있다. 자유주의를 탐구하기 위한 것이 영국으로의 이민을 선택한 하나의 이유라고 Dahrensdorf 경은 말한다. 끝.

☞ 목차로